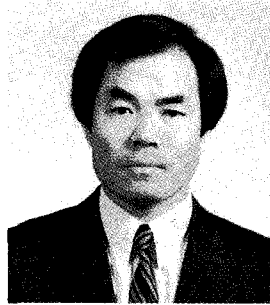


낙농육우 산업의 동향과 대책 방안



김인식
본회 조직지도부장

우려했던 환원유 출현

유제품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도 국내 낙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원유만은 수입해 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내 시유 유통기한이 5일로 되어 있으니 미국, 구라파의 원유가 바다로 수송하는 기간이 최소 1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비행기로 날라오면 수송비로 인해 비쌀수 밖에 없다는 계산에서였다. 물론 가까운 일본이 있고 일본북해도의 원유 질이나 낙농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우리보다 원유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입해 올 수 없다. 따라서 국내 낙농제품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시유만은 그나마 우리 낙

농가의 몫이라는 생각에 지킬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왔다.

UR협상시 분유만은 관세 220%로 묶였기 때문에 안도하고 있던 찰나에 모조분유가 쏟아져 들어온 것을 두고보면 자만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 사실 모조분유는 수입할 때 관세청에 신고하는 공식명칭이거나 용어가 아니다. 분유 대응으로 국내에 수입되고 사용되므로 어느새 「모조분유」로 통용되는 지경이다.

모조분유 수입으로 한국낙농업은 분유재고의 만성적 채화, 국내 분유의 사용기피 등 낙농위기가 도래되었고, 드디어 산업피해 구제신청으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분유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에는 거의 모든 식품업체가 수입 모조분유로 대체 사용하고 있고, 낙농업의 현장을 자처하는 유업체 역시 가공제품에는 모조분유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다. 돈이 되는 곳에 기업이 있다는 상식에서 보면 유업체라고 모조분유 사용을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낙농가 없는 낙농업을 하게 될 결과가 도래할 것을 유업체 스스로 앞장서고 있음은 낙농가와 유업체의 동반자적 노력이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2만여톤의 모조분유 수입 배정권을 둘러싼 농림부의 줄속 처리를 두고 분노하지 않는 낙농가가 없다. 모조분유의 수입배정은

과거의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것마저 낙농가와와는 일체의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었다. 지난 3년간의 수입 실적이라면 사유업체에 국한된 것이고, 이미 그것을 공식화 하듯 한 국유가공협회에 배정권을 안겨주었다. 나중에야 알고 강하게 항의하자 변명만 일관하는 행정책임자의 태도로 보아 낙농업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낙농가 밖에 없다는 생각만 갖게 한다.

모조분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향후 생겨날 추가적인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 평소 우려했던 대로 과연 환원유는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국민이 그동안 신선우유 즉 시유에만 길들여져 있다는 것으로 방심할 수 있다.

유업체는 일시에 수입분유로 환원유를 생산해 낸다면 큰 반발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낙농가와 소비자가 감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금야금 시장잠식을 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터져나온 2개 유업체의 제품을 두고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정작 우려를 할 낙농가들은 귀족은 듯 조용하고, 소비자들은 격분해 하고 있다. 마치 협회가 과장된 언론보도를 동원해 유도하는 양반응들을 보이는데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애써 피하고자 한다. 다만 일반언론이 보는 객관적 보도를 소개함으로써 낙농가의 판단을 기대코자 한다. 모조분유는 듣는이에게 자극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혼합분유라는 명칭으로 제품표기

를 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수입함에 있어 공식용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분유를 수입해서 물을 탄 환원유가 시장잠식을 하게 되면 낙농가들이 최후의 보루품목으로 기대했던 시유시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지를 제외한 일간지나 TV등 방송매체에 최초로 보도된 기사내용 만이라도 소개함으로써 낙농가들이 사실인식을 올바르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비자단체는 진상조사 토론회 개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한 해당회사 제품 불매운동 전개 등 소비자주권 행사를 통해 국내 낙농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추진되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공업무 일원화 추진

낙농육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민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가 실현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대통령직속 행쇄위(위원장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15명 위원중 몇명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인원 전원이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당위성을 제기했고, 일원화시켜 축산업의 안정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질타의 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사필귀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이미 행쇄위 실무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똑같은 주장으로 결론지어짐으로써 농림부 환원은 시간문제

유업체는 일시에 수입분유로 환원유를 생산해 낸다면 큰 반발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낙농가와 소비자가 감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금야금 시장잠식을 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터져나온 2개 유업체의 제품을 두고 충격을 던지고 있다.

라고 판단케 하였었다.

행쇄위 본회의 결정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통령께 보고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부터 '행정쇄신확정과정'로 확정되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 통보됨으로써 양부처 소관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개정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처간의 업무조정엔 행쇄위결정으로 농림부에 이관키로 확정되었으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하고 법개정엔 국회소관이므로 국회의 한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개정으로 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지난 85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 강제로 되다시피하여 이관된 축산물 가공업무 관장권은 12년의 어려운 분투끝에 제자리에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한다.

가공업무관장에 따른 낙농육우산업의 판도변화는 여러형태로 가늠케 한다. 우선 최근의 소값 문제



일부 乳製品 값싼 모조분유 사용 말성
 = 고급우유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대 =
빙그레·해태유업등 일류기업서 물의

(서울=聯合) **홍콩** 기자 = 일부 유가공업체들이 값싼 외국산 모조분유로 만든 우유제품을 고급 우유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해 불의를 빚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빙그레·생류 갑습알파우유와 해태유업 '엘리트' 고칼슘우유는 기존 市乳(원우유)와 똑같이 포장된 제품을 내면서 기존 시유들이 국산 원유를 1백% 쓰는 것과는 달리 국산 원유보다 절반이상 저렴한 수입모조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일부 유가공업체들이 딸기·바나나·초콜릿맛을 내는 가공우유를 만들면서 수입 모조분유를 사용해 왔으나 시유와 모양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유 대신 모조분유를 사용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빙그레는 '생류 우유'와 관련, 헤드폰을 낀 컷소를 등장시켜 '행복한 컷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 컷소에서 나온 원유를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이 제품을 일반 우유보다 비싼 고급우유로 둔갑시켜 다른 회사의 고급우유와 비슷한 가격을 받고 있어 소비자를 속인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빙그레 '생류 갑습우유'의 경우 원재료를 보면 원유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혼합분유(모조분유)와 혼합발효분유, 발효분유, 비타민 AD 를 함유하고 있다.

해태유업의 '엘리트' 고칼슘우유는 빙그레와는 달리 원유를 약간 사용하고 있으나 혼합분유와 발효유, 유청갑습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일반 슈퍼기준)을 보면 해태유업의 '엘리트' 고칼슘우유는 경우 1백 80ml짜리가 3백90원, 4백75ml 8백원, 9백50ml 1천5백원을, 빙그레의 '생류 갑습알파우유'도 1백80ml 3백80원, 4백50ml 8백원, 9백30ml 1천5백원을 각각 받는 등 시중의 고급우유의 특징이다.

일반 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산 원유값은 보조급을 포함해 kg당 5백30-5백50원 선인데 비해 수입 모조분유의 경우 kg당 2천5백-2천7백원에 달하나 사실상 10배 정도 희석해 사용하기 때문에 kg당 실제 가격은 국산원유의 반값인 2백50-2백70원에 불과하다.

또 수입 모조분유는 분유함량이 75%선에 불과한데도 유가공 및 식품업체들이 국산 원유나 분유보다 훨씬 저렴한 바우징으로 수입해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낙농기에 의해 폐쇄될 것다며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빙그레와 해태유업측은 이들 제품이 일반 시유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능성이 첨가된 가공우유로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가격이 기능이 첨가돼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 시유와 똑같은 포장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 제품이 시유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 허가를 저지방 가공우유로 받은 기능성 제품으로 일반 시유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해태유업 관계자도 "엘리트 갑습우유의 원유 함유량은 약 40%인데 다른 원료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1호선에 달하는 국내 시유시장은 신산한 국산 원료로 1백%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이처럼 일부 업체들이 알뜰한 상품(商標)으로 나올 경우 오해의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값싼 외국산 발효우유를 들어오게 할 우려가 크다고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외국산 모조분유 수입액은 1억7천1백62만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빙그레의 수입액은 2천4백18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끝)

가공유를 생우유처럼...

빙그레·해태 표시 기준 어기고 눈속임 광고

소비자단체 반발

빙그레와 해태유업 등 유가공 업체가 1백%의 원유(시유)가 아닌 수입 모조분유를 혼합 가공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아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빙그레와 해태 유업은 수입 모조분유를 혼합 가공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태 유업이 만든 수입 혼합분유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빙그레는 사용유를 제 품명 유주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표시기준을 어기고 제품명에 표시한 '100% 가공유'라고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켜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만 해태 유업은 생우유로 돼 있는 100% 가공유 제품인 '생우유'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100% 가공유'라고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켜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태 유업의 엘리트 고칼슘우유는 국산 원유 45%에 수입 혼합분유와 유청을 혼합한 가공우유 제품이다. 역시 제품명 표시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총합연은 차명행위를 제

거한 발효유에 치즈(치즈)와 그 아 유를 혼합한 것으로 주로 0.1% 이하의 발효유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국산 혼합분유 같은 국산 원유가 유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들 두 회사 제품은 100%에 국산원 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빙그레와 해태유업은 이에 대해 같은 혼합분유는 합성분유를 강하게 위해 별도로 구분해 제조하면 혼합분유라는 데는, 제품 '상표'와 '100%'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100%' 표시는 '100% 국산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0% 가공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값싼 수입 혼합분유 써 더 논란

소비자단체선 "불매운동 퍼겠다"

'생우유 눈속임' 때문... 관련업체 "품질 낮지않아"

빙그레와 해태유업이 국산 원유나 분유보다 가격이 싼 수입 혼합분유를 생우유제품처럼 보이게 한 행태에 대한 논란이 혼합분유 논쟁과 함께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빙그레의 경우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목장을 배경으로 컷소 시유를 하나 행랑을 그려놓은 내부 등에 대대적으로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소에서 바로 나온 생우유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빙그레와 해태는 모두 '고의적'으로 생우유처럼 보이게 한 사실이 없으며, 분유를 썼다고 해서 꼭 생우유보다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대한유부결연협회 김현주 회장은 "업체들이 수입 혼합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낮은 가격이 국산 시유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우유는 신선도가 생명이라는 것은 상식인데 혼합분유를 사용한 제품의 질이 더 낫다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법에 위배되는 거까지 포장하기 전에라도 소도둑 되지는 '가공유'라는 식 분유행위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한유부결연협회는 다음달 2일 양쪽 업체의 정부당국, 소비자단체들



이 참가하는 전산도회를 열기로 하고, 이 차에서 차선도 관련된 경우 해당 회사 제품과 판매처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우유 협회에서는 "100% 가공유 논쟁 등으로 우유 소비가 급감해 국내 원유재고량이 지난 3월만 현재 1만2천여톤에 이르렀다"며 "국산 원유제품을

이 알다시피 값싼 혼합분유를 수입하는 데만 애를 끼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사 상층 이사는 "합성분유와 우유는 발효분유에 단백질 농축분과 식육성 유지분을 섞은 혼합분유를 외국 업체에 위탁수출해 생산하는 것으로, 가격도 일반 수입원유보다 20%정도 비싸다"며 "국내에 있는 제품 목록을 충족시키는 혼합분유가 생산되지 않아 경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 혼합분유와 생우유를 섞어 생산되는 초유액, 딸기·바나나우유 같은 제품은 가공유로 분류돼, 포장용기 전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될 조류의 제품들도 생우유가 아닌 가공유인 만큼 용기 전환에 이를 표기하도록 하고 광고내용도 재검토할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겠다"고 말했다.

를 두고보자. 산지 소값은 폭락하여 농가들이 아우성이지만 실제로 정육점의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거의 불변이다. 뿐만 아니라 구분 판매제 실시를 올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지만 거의 지켜진다고 믿는 소비자가 없다. 구분판매제 실시를 기화로 육우와 젓소값만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으나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이렇다할 구분판매는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단속이 없어서 구분판매나 연동제시행이 안되었던 것이 아니고 보면 축산농민을 관장하고 축산물의 수급조정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유통을 관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게 될것으로 본다.

우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조분유수입이나 식품업체의 업무판장이 보건복지부이고 보면 유업체에 대한 농림부의 통제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유업체 창고에 분유가 가득 쌓여 있음에도 보조분유가 값싸다고 수입이 되고 협회나 농림부는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국산분유를 싸게하여 내다 팔테니 식품업체들이 제발 좀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지경이다. 6천원대 분유를 3천원대에 사달라는 애원섞인 요청이 고작이었다. 수급을 책임진 부처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안전, 보건을 내세워 판장권을 놓치지 싫어하는 정도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연일 터져나온 우유사건 이를테면 잔유물질 검출사건, 발암물질사건, 0-157사건, 탄저병사건 등 기역조차 두려운 사건들을 터뜨리면서 낙농육우산업

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었다. 이제 제자리를 찾으면서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추진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9월 정기국회는 우리가 기대하는대로 민생 관련법률이 논의되거나 개정되리라는 기대는 분위기가상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기국회 이전의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회에서 우리의 오랜 숙원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논란없이 개정시킬 것인가가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이미 낙진법이 그랬듯이 뻘한 내용과 여론을 그대로 덮어둔채 시간끌기에만 치중하는 국회를 믿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이다.

국회의원들이 농민요구를 찾아서 법개정에 솔선수범한다면 그것만큼 다행한 일이 없겠으나 여러 경험에서 본대로 농가들이 요구하고 활동해야만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나서야 한다. 유권자인 양축농가들이 해당국회의원들에게 전화 걸기, 방문하여 설명 하기, 건의서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회의원이 부담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미 축산물위생처리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바꾸어 전면 개정키 위해 4월 26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5월내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6월 3일 국무회의 상정으로 행정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 그 직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

**TMR은 농가가 필요로 해서
농가 스스로 나서서
추진한 시료제도이다.
배합소 설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립된
배합소가 회원농가에게
기여하고 우리나라에
알맞는 시료제도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다.**

다면 6월중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찬반양론의 주장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측의 반론에 대비해 우리 농가들이 최종 마무리 작업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두려운 상대가 유권자이다. 단체의 주장을 공론으로 받아들여주는 하지만 유권자의 요구야말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국회를 앞두고 가공업무를 위한 법률개정에 지역에서 나서주길 요청하게 되면 지역의 우리 회원들께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법개정의 당위성을 제기하여 유종의 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TMR 사료 발전 대책

이제 대부분의 낙농가나 육우농가치고 TMR사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TMR사료에 의존하는 농가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TMR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실화 되고 있음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착 TMR을 사료제도의 개선대책으로 보아 이를 제도화하여 양성화시키는 지원대책이나 기술적 발전 방안의 마련, TMR원료 공급을 원활히 하는 대책마련 등의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사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볼때 생산성 향상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고, 우리 축산업에서 사료문제를 외면한 경영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우리 낙농가들이 스스로 나서서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사료 배합체계를 갖추고자 TMR을 개발하고 있고 이에 전국적으로 낙농사료 제도로 자리잡으면서 배합소가 계속늘고 있다. 가축사료중 가장 까다롭고 과학적인 사료체제가 낙농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 힘으로 현재의 TMR이 있기까지 체계를 갖춘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낙농가들의 위대함이 돋보이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가능성을 갖고 성공적인 낙농업 정착에 매진 할 것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생겨날 제반문제에 있어 어떻게 대처하며 TMR을 발전시키도록 해 나갈 것이냐이다. 가령 TMR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 원료 공급을 원활히 하는 문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문제, 기술의 향상 및 표준화의 과제 등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제 해결은 TMR공장을 짓고 열심히

히 배합하여 해당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TMR배합소 전체가 단합해야만 풀릴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월 23일 협회에서는 전국 TMR대표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겸한 대책회의를 갖고 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 하였다.

우선 원료공급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옥수수등 곡류의 공동구매를 통한 공급방안이 있어야하고, 이를 배합소가 상시 구입하여 배합할 수 있도록 물류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그동안 협회와 서울우유조합이 이미 정부에 건의해온 과제이고 농림부에서 전국에 3개소의 공급기지 건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부가세의 문제는 배합소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편법적인 수단으로 회계처리되거나 혹은 세금 부과에 전전공공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토로되었다. 7월 1일부터 배합사료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면서도 TMR이 누락됨으로써 생겨날 농가의 부담이나 세무처리상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TMR배합소 전체가 뜻을 모아 건의하고 노력해야 됨을 결론지었다.

기술향상과 표준화 문제 역시 간단한 것이 아니다. 현재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전문 직원을 두고있고 배합소별 기술지도를 통한 선도적인 기능이 발휘되고 있으나 기타의 TMR은 기술 수준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TMR배합소 전체가 힘

을 모아 기술체계를 정립시키고 나아가 전문가와 연대한 기술교본 발간, 기술향상 연수회 개최등 많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단합해야 함을 결론지었다. TMR배합소간의 정보교환과 친목도모, 전반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TMR협의회를 발족시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뜻을 모았다. 따라서 회장등 임원의 선임을 통한 집행부 구성과 활동이 시급함을 느끼고 우선 협회가 주도해 줄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TMR은 농가가 필요로 해서 농가 스스로 나서서 추진한 사료제도이다. 배합소 설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립된 배합소가 회원농가에게 기여하고 우리나라에 알맞는 사료제도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다. 공장 설립은 뜻이 통하는 회원들과 힘을 모아 추진하였다면 정책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TMR이 다 참여해야 한다. TMR과제해결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착 대책 회의는 아예 참석조차 않는 배합소가 늘상 있다. 무릇 지도자는 희생과 봉사가 따르기 마련이라면 배합소 전체가 단합해야 하는 자리에 굳이 불참하여 힘을 약화시킬 이유가 없으리라 본다.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 몇몇 과제는 반드시 초기에 성취되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TMR이 모두 모여 힘을 모으면 행정도 언론도 관심을 갖고 대안마련에 동참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